

노란봉투법이 공장 자동화를 촉진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입니다.

1. 관련 기사

- 8.31.(월) 한국경제, 노란봉투법의 역설 ... “공장 자동화 가속화로 일자리 22만개 사라진다”

-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용률이 67%에서 52%로 15%포인트 하락할 경우 공장 자동화가 0.4% 촉진되고 일자리는 7만 3000개(0.3%) 줄어든다. 소송 인용률이 22%로 떨어지면 일자리는 21만 9000개(1%) 감소한다.

2. 설명 내용

- 기사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용률이 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, 기업에서는 공장 자동화에 투자를 늘리고 근로자 고용은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하였으나
 -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실증적 근거 없는 연구자의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, 통계분석을 통해 입증된 예측치가 아님
-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,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음
 - 노동조합법 제3조는 불법파업 손해에 대한 공동 배상책임은 유지하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책임 범위 내에서 손배책임을 지도록 한 '23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임

- 이에 불법파업 손해에 대한 노조원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면서 노조 내 지위와 역할, 쟁의 참여 경위와 정도, 손해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임

□ 따라서,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이유로 불법파업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용률이 떨어지고, 이를 이유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임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	책임자	과 장	강승헌 (044-202-7611)
		담당자	사무관	권유리 (044-202-7599)

